

보도	2024.2.7.(수) 조건	배포	2024.2.6.(화)
----	-----------------	----	--------------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장	홍석린	(02-3145-8270)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담당자	팀장	박재민	(02-3145-8129)
	대한법률구조공단	책임자	단장	위승용	(054-810-1090)
	법률지원단	담당자	팀장	윤성목	(02-6923-9131)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해 첫 무료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 지인추심, 성착취 추심 피해사례 2건에 대한 피해자 소송대리를 시작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그 **첫 사례**로,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하여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 본 건 **소송지원 사례**의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하였다가 **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 보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고,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및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 불법사금융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겪고 계시면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3번)에 신고하세요!
•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 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I. 경 과

- 대통령께서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23.11.9.)」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차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 아울러 법이 정한 추심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이에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총력 대응기로 하였습니다. (‘23.12.7. 금감원·법률구조공단 보도자료 참조)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그 첫 사례로,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하여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II. 소송지원 사례

- 본 건 피해사례는 ①지인추심*과 ②성착취추심*으로,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제공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 * (지인추심)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 (성착취 추심) 치주 나체사진·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 송부 등 대중 유포 협박
- 피해자들은 원금과 법령상 이자를 상환하였음에도 지속적인 불법 추심과 상환요구에 시달리며 대부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는 바, 이는 반사회적 불법대부의 전형적인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①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불법 추심

◆ 피해자 A씨(20대 남성) : 불법대부계약 체결시 제공한 연락처로 대부업체가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연락하여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

'21년경 17회에 걸쳐 10~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이자 6~20만원으로 이자율이 1,520%에서 7,300%에 달함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가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대부사실 유포 및 욕설·협박 등 공포심을 유발하여 피해자와 가족, 지인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 소개를 통해 돌려막기를 유도하여 여러 업체들로부터 과중한 채무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음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차용증
작성

고금리피해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 등
불법추심

☞ 피해사례의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소송지원 내용]

□ 지인추심은 채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악랄한 범죄입니다.

- 특히, 동 사례처럼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 등은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백만원 위자료 청구

사례② 성착취 추심

◆ 피해자 B씨(30대 남성) :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나체사진, 차용증 등을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

'22년말경 불법대부업체 D사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계정 송부

* D사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도 이용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업자는 가족, 직장, 자녀 선생님 등 광범위하게 연락하여 대부사실을 유포하였고,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 나체사진을 올려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

지인·가족
연락처,
나체사진
담보제공

대부사실,
나체사진
유포 등
불법추심

[소송지원 내용]

- 성착취 추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 무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 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천만원 위자료 청구

III. 기대 효과

- 1 동 소송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계약 무효화,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지속적인 소송지원과 홍보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례를 축적해나갈 예정입니다.

② 또한, 그간에는 서민·취약계층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 대부계약이 만연함에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및 기존 판례는 부재하였으나

- 동 소송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대부계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초과납입 이자**의 **반환**, **위자료 청구** 등이 병행됨으로써 사실상 계약 무효 상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IV.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1 유의사항

-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도 아래의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반사회적 불법추심 예방을 위해서는 주소록, 사진파일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이에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붙임2 참고) >

- 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②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하세요!
- ③ **주소록 · 사진파일 · 앱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④ **불법추심 피해발생**(우려)시 **금감원·경찰**에 **신고**하세요!
- ⑤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 ⑥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삭제** 등 요청하세요!

- 만약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를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2 향후계획

-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하여 피해자 무효소송(연내 10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시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등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금융위·법무부·행안부·국세청·경찰청·대검찰청·과기부·방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s.or.kr>)

① 피해자 A씨(20대 남성) : 지인 추심

◆ A씨는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체 C사로부터 급전을 빌렸다.

2021. 5. 28.부터 2021. 9. 12.까지 17회에 걸쳐 10 ~ 2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대출기간은 3 ~ 14일이었고 그 기간 대출이자 6 ~ 20만원으로 대출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이자율이 무려 1520.8%에서 7300%에 달했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이들의 요구대로 가족, 지인, 회사 동료의 연락처 등을 제공했고,

상환이 안될 경우 지인에게 연락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으며, 위 차용증과 신분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까지 보내고 나서야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 A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체는 추가비용을 내고 대출연장을 시키거나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하여 돈을 빌리게 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채무가 점점 더 불어나 결국 A씨가 C사에게 갚은 원금만 225만원에 이자는 178만원까지 되었으며, 이외에도 여러 불법대부업체들로부터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C사를 포함한 불법대부업체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는 불법 채권추심을 하였으며, 직장에도 대부사실이 알려져 채무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② 피해자 B씨(30대 남성) : 성착취 추심

◆ 두 자녀를 둔 가장 B씨는 한 건설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월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지만, 건설업황 부진으로 수개월째 급여가 연체되자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D사로부터 급전을 빌렸다.

금액은 20만원으로, 대출기간 7일, 상환금액은 40만원이며 연체시 하루 이자 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대출기간내 상환하더라도 이자율이 무려 4,562%에 달했다.

대출과정과 조건은 까다로웠다. B씨가 인터넷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총책은 텔레그램방으로 초대해 갖가지 정보를 요구했다.

급전이 절박했던 B씨는 이들의 요구대로 조부모, 부모, 직장 지인,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스크린샷, 친척·지인 등 9명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건넸다. 이에 더해 자필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까지 전송했다.

◆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D사의 총책 등은 B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B씨의 부친과 친구, 지인 등 9명에게 유포했다.

B씨는 D사에 나체사진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D사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에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D사를 비롯한 불법대부업체들은 텔레그램 조회방을 통해 채무자들의 연체이력 등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체사진 등 민감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2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o.or.kr) 참고>

☑️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

-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 ☞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불법추심 피해발생(우려)시 **금감원·경찰**에 신고하세요!

- ☞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

☑️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 ☞ 대부업자(등록·미등록)로부터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붙임3 참조)

☑️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삭제 등 요청하세요!**

- ☞ 온라인 등에 유포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하세요.

붙임3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 후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The screenshot shows the FSS website interface. On the left, the '민원·신고' (Minwon-Sigong) menu is expanded, showing various options. A red box highlights the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Application for Free Support for Debtors' Representative and Litigation Attorney) link. A red arrow points to the '불법금융신고센터' (Illegal Financial Reporting Center) section.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information about the illegal financial reporting center, including a list of services and a table of fees.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불법채권추심·고금리 수취·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대부중개업체 등에 의한 대출중개수수료 권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안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 신고코너'를 설치·운영하면서 중개수수료 권위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의 불법 행위, 불법 상호의 사용, 기타 사이버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범감시단 전용제보	『온라인 시범감시단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미등록대부, 적업대출, 등장매매, 신용카드 현금화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①**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②**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月 278.6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